

정후식 칼럼



논설실장·이사

촛불 시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다음달 10일이면 출범 2년을 맞는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을 주도한 광장의 열기만큼이나 첫출발은 비장했다. 그 비장함은 문 대통령의 취임사에도 잘 투영돼 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국민의 뇌리에 가장 깊숙이 각인된 말이 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운 것입니다.”

특유의 감성과 수사법으로 직조된 취임사에 국민들은 감동했다. 취임 선서식에선 그 흔한 예포 발사나 축하 공연도 없었다. ‘검소한 권력이 되겠다’는 다짐만큼이나 탈(脫) 권위적인 행보였다. 지지자들에게 우리 손으로 저런 대통령을 뽑을 수 있어 뿌듯하다는 자부심을 안겨 주기에 충분했다. 그로부터 두 해 가까운 시간이 훌쩍 지난 지금, 현 정부를 지켜보는 유권자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경고등 속 민심의 향배는

최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꾸려졌다. 일곱 명의 장관 후보자 중 두 명은 국회 인사 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낙마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자녀의 호화 유흥과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이 제기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가

처음으로 지명을 철회했다. 나머지 다섯 명 중 두 명은 야당의 반발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임명이 강행됐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인사는 박근혜 정부(10명) 때보다 더 많은 11명으로 늘었다. 청문 대상자 중 낙마한 인사는 여덟 명으로 참여정부(3명)의 갑질 이상이다. 물론 두 명의 후보자가 낙마한 마당에 추가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는 지나쳐 보이는 감도 없지 않다. 하지만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보면 이번 인사 검증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중론이다. 게다가 부실 검증 논란에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집권 중반기의 길목에서 맞은 4·3 보궐 선거에서도 냉엄한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남 두 곳의 국회의원은 진보와 보수 진영이 1 대 1 무승부를 기록했다. 하지만 불과 9개월 전 지방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을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한 점을 감안하면 여론으로선 체면치레에 그쳤다는 평가다. 인사 실패 등에 대한 민심의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민주당 내에서조차 내년 4월 총선을 격정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민심의 이탈은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추이에서도 엿보인다. 취임 초 80%를 웃돌았지만 물 들어선 40%대로 떨어져 반토막이 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 3.1%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41%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갤럽의 9~11일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47%로 상승했지만 지지도 하락세가 시나브로 이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국정 지지도 하락에는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지표 악화 등 경제 정책에 대한 불안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가장 많이 꼽힌 것만 봐도 그렇다. ‘평화가 경제’라며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사실상 ‘올인’해 온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도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그럼에도 현재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과거 대통령들의 집권 2년 차 4분기 국정 지지율은 김영삼 36%, 김대중 50%, 노무현 27%, 이명박 47%, 박근혜 44% 등이었다. 하지만 하락세가 이어져 30%대로 떨어지면 야당의 저항과 내부 분열이 본격화하면서 국정 운영 동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국정 과제와 촛불 민심이 부여한 개혁 과제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 눈높이서 소통·협치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조사 내용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호남 지지율이다. 지역별 표본수가 많지 않아 한계가 있긴 하지만 앞서 언급한 한국갤럽 조사에서 광주·전라권의 긍정 평가는 4월 첫 주에 69%, 둘째 주에는 72%에 달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50%를 밑도는 다른 지역과 확연히 다르다.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얻은 호남 득표율(광주 61.14% 전남 59.87% 전북 64.34%)보다 높은 지지를 여전히 보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호남 배려를 그동안 잘 지켜 온 데 대한 고마움도 담겨 있을 것이다. 1·2기 내각에 호남 인사들을 두루 중용했고, 4년 이상 표류하던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의 성사에도 결정적역

할을 했다.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사람이 먼저’라는 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여전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책의 혼선에도 방향성과 의지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 조사에서 긍정 평가 이유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함께 ‘최선을 다함’ ‘열심히 한다’가 우선적으로 꼽히는 것이 이를 말해 준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도자는 선한 의도가 아닌 결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좋은 결실을 얻으려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되새겨 모든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캠프 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사의 스펙트럼부터 넓혀야 한다. ‘내 편, 내 편’ 가르치 말고 진영을 넘어 인재 풀을 확장해야 한다. 인사 추천 및 검증 시스템의 재점검과 보완도 필요하다. 그것이 ‘기회의 평등’을 여는 길이다.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정의감과 의욕만 앞세우는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 원칙을 견지하면서 현실을 점목하는 실용의 자세로 공정 사회와 공정 경제를 구현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민생을 안정시키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차가운 ‘냉골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무엇보다 극한 정쟁으로 치닫는 정국의 실태를 풀기 위해서는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삼고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나눠야 한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처럼 야당 의원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타협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포용 국가’ 아닌가.

문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3년 이상 남아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시간은 충분하다.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은 문 대통령의 취임사에 오히려 담겨 있다.

社說

사고 잦은 무진대로 안전 대책 서둘러야

광주시청 뒷길인 서구 계수교차로에서 동광산 톨게이트까지 10km에 이르는 무진대로는 도심과 주요 산업 단지, 전남 서부권을 잇는 핵심 간선 도로로 광주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이다. 그렇다 보니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 일췌이고 하루가 멀다 하고 교통사고가 빈발해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일보 취재 팀이 무진대로 현장을 찾은 지난 8일 오전 11시께. 출근 시간이 이미 지났음에도 정체가 심각했다. 도로 중간에서 발생한 4중 추돌사고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은 평소 1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구간을, 40여 분만에야 겨우 통과할 수 있었다.

교통 혼잡과 사고 다발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도로가 시작되는 계수교차로는 하루 통행량이 25만 5057대로 광주에서 가장 많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무진대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공식 집계된 것

만 133건이었다. 이로 인해 19명이 중상을 당하고 309명이 경상을 입었다.

더 큰 문제는 제한 속도가 시속 80km로 빠른 데다 갑자기 꺾이는 곡선 구간이 많아 한 번 사고가 나면 연쇄 추돌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 경우 한 시간 이상 정체가 되기도 한다.

운전자들이 ‘마(魔)의 도로’ 혹은 ‘교통지옥’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하지만 도로를 관리하는 광주시는 도로 구조상 문제는 없고 안전거리 미확보 등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이 문제라며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

교통 정체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진·출입로를 넓히고 도심으로 빠져나가는 중간중간의 도로를 확장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울러 광주시는 곡선 구간에 운전 주의를 알리는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제한 속도를 낮추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노사 상생 도시 광주’ 실현 한 발 더 다가섰다

‘노사 상생 도시 광주’ 실현에 택시 업계 노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나섰다. 노사 상생은 민선 7기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최근 이용섭 광주 시장과 택시 업계 노사는 ‘노사 상생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만남이 의미가 있는 것은 ‘노사 상생 도시 광주 실현’과 관련한 민간 기업 노사와의 첫 번째 협약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들은 노사 책임 경영을 지향하는 노사 상생 문화 정착, 선량한 사용자의 의무와 건전한 노조 활동을 통한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그동안 노사 상생 협약은 자치구 등 공공 부문에서만 이뤄져 왔으나 앞으로 민간 부문 영역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광주시는 ‘노사 상생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지난 3월 18일 5개 자치구와, 같은 달 27일에는 7개 공공 기관 노사와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민주노총 소속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본부 12개 지부와 광주 지역 택시노동조합 21개 분회 등 총 33개 노사 대표가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택시 노동자들이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 전역에 울려 퍼지고 대한민국 전체 산업으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동안 ‘광주’ 하면 ‘강성 노조의 이미지’가 너무 강했고, 이는 투자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와 공공기관 노사에 이어 택시 업계 노사까지 노사 상생에 참여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노사 상생 도시 광주’를 만드는 일은 이 시장의 말대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한국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적인 과업’임에 틀림없다. 이번 협약을 함께 실천함으로써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모두가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은펜칼럼



옥영석 농협 하나로유통 부장

1~2인 가구 대세라더니 어쩌다 보니 나 역시 혼자 사는 신세가 되었다. 구 내식당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판 들고 다니기도 신물나지만 그럴싸하게 먹어 보겠다고 삼삼오오 나서는 식당가에서도 집밥 맛 나는 곳 찾기란 쉽지 않다. 무엇보다 깊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 위에 적당히 익어 시름한 김치를 올려 아삭아삭 소리 내어 먹고 싶은 마음이야 홀로 사는 사람뿐만의 바람은 아닐 것이다. 중주국이라는 자부심만 들먹였지 알

집 나서면 더 먹고 싶어지는 쌀밥에 김치

고 보면 우리는 세계 최대의 김치 수입국이다. 2004년 만 2605t, 2010년 19만 2937t, 2015년엔 22만 4120t으로 수입량이 늘다가 지난해에는 29만 742t을 들여왔다. 8개 수입국 중 중국의 비중이 99%가 넘는다.

김치 소비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정에서 65.4%가 소비되고 외식업소와 급식업소에서 34.6%가 소비되고 있다. 그 중 수입 김치는 국내 소비량의 13.4%, 상품 김치의 33.1%, 외·급식업체 소비량의 38.7%, 외·급식업체 상품 김치 소비량의 88.1%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외·급식업체에서 직접 담그지 않고 사다 쓰는 김치는 십중팔구 중국산이라는 얘기다.

국산의 평균 단가가 2661원인데 비해 중국산은 918원으로 가격이 2.9배이니, 이문이 남아야 하는 외·급식업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결국 수입 김치의 중

가량만급 배추며, 마늘, 양파 등 국내산 양념 채소는 남아두고, 계약 재배나 수급 안정 사업들이 무력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맛이나 색으로 물을 구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국내산이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띠고 무생채, 파, 마늘 등 부재료 가 많이 섞여 아삭하지만, 중국산은 푸른 잎이나 부추 등 양념이 거의 없고, 겉붉은 색에 텁텁하고 물컹한 느낌을 준다. 내 돈 들여 수입 김치를 먹어야 하는 소비자들은 마지못해 먹는 다지만, 해외에서 온 관광객들이 겉붉은 빛깔에 물컹한 그 식감을 한국 김치 맛으로 알까 걱정이다.

소비자들은 김치를 구입할 때 맛(33.4%), 가격(16.2%), 위생·안전성(15.8%)을 우선시 하지만, 외·급식업체는 저렴한 가격(32.3%), 번거로움(24.1%), 시간 없음(18.6%)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외·급식업체에서 국내산

김치를 맛보려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지금과는 달라야 한다는 얘기다.

다행히 관계 당국이 김치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학교 급식 김치 표준 마련은 물론 급남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국산 김치 사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에서도 지난 주 농민 단체와 소비자교육중앙회 등과 함께 국산 농산물로 만든 김치의 소비를 확대 시키자는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한다.

음식점에서는 국산 김치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은 그 식당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자는 캠페인이 우리 고장에서 먼저 시작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간다면 기쁜 소식 아닐 수 없다. 삼시세끼를 대부분 밖에서 해결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참으로 반가운 일이고, 맛있는 한 끼를 더없는 소확행으로 생각하는 내게는 아침에 일어나 식당으로 달려갈 생각에 잠을 설치기도 할 테니 말이다.

물 부족을 해결해 주는 ‘지하수 저류지’

계를 벗어나 비로소 통합 관리로 자리매김 하였고, 국민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물 관리 일원화에는 대응적 차원의 ‘철학적 물’(philosophical water)의 개념이 담겨져 있다. 즉 물에 대한 공공성 강화, 이해 당사자간의 포용적 수용성과 관리 영역을 뛰어넘어 새로운 국부 창출을 이룰 수 있는 고도의 가치성을 지닌 생물 자원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지난 2월 발표된 2017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9%가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지만, 여전히 1%인 48만 2000명은 물 복지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특히 상당수의 도서 지역은 여전히 상수도 미급수 지역으로 남아 있고 대부분 개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으나, 부분별한 개발로 인해 수원 고갈, 해수 침투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2011년 상수도 미급수 지역 및 해수 유입에 따른 생활용수 사용에 지장을 겪는 도서·해안 지역 주민들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수 저류지’ 도입을 계획하였다. 지하수 저류지는 땅속에서 인공 차수벽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저장함으로써 지하수 자원을 추가 확보하고 해안 지역에서는 해수 침투를 방지하는 친환경적인 수자원 확보 기술이다.

국내에선 1980년대 극심한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용수 10개년 개발 계획(1982~1991)의 일환으로 5개의 농업용 지하수 저류지가 설치됐다. 1998년에는 속초에 쌍천 지하수 저류지를 설치하여 현재 시 전체 용수 수요량의 약 80%를 지하수로 공급 중에 있으나, 최근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량 부족으로 쌍천 상류에 추가 설치를 추진이다.

올해 환경부와 영광군,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영광군 안마도에 2021년까지 약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하수 저류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환경부와 영광군 간 지하수 저류지 설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같이 지하수 저류지 사업은 국민이 직접 요청하고 정부, 지자체, K-water간 상호 협력을 통해 소외 지역의 물 복지를 실현하는 철학과 통합의 의미가 담겨있는 스마트한 수자원 활용 기법이다.

K-water는 정부 및 지자체와 함께 상대적으로 섬이 많은 전남뿐만 아니라 내륙의 상수 물 부족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지하수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하수·지표수의 상호 연계로 새로운 수자원 관리 철학을 실현하고자 한다.

無等鼓

소방관들은 화재 현장에서 항상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일한다. 소방직은 그래서 ‘극한 직업’으로 꼽힌다. 2001년 미국 9·11 테러 당시에는 소방관 343명이 순직했다. 중국에선 지난달 30일 쓰촨성 산불로 31명의 소방관이, 그리고 한국에서도 2001년 서울 홍제동 다기구 주택 화재 붕괴 사고로 소방관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소방관들의 순직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소방관들은 ‘어느 소방관의 기도’ 라는 시를 신조처럼 받아들인다. “산이시여/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

어느 소방관의 기도

도 12.5%나 된다. 소방관 없는 119지역대가 전남에만 32곳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광주·전남 소방관 2명 중 1명 꼴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관 1명당 한 해 평균 7.8회의 참혹한 현장 경험을 한다니 그럴 만하다.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고 있는 소방관들이 많다. 하지만 소방관의 경우 전문 치료센터가 없어 경찰병원에 위탁하고 있는 게 아픈 현실이다. 군인을 위한 전문치료센터는 전국 19개 병원이 있는 것과 비교

된다. 강원도 산불 이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청와대 청원인 25만 명을 넘어섰다. 여론 조사에서도 국가직 전환 찬성 의견이 78.7%로 나타났다.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여야가 5년 전에 합의한 사항이다. 그런데도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통한 처우 개선 법안’은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도록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기대를 국회

가 저버리지 않았으면 한다. /최권일 정치부장 cki@kwangju.co.kr

기고



유영권 수자원공사 지하수자원부장·공학박사

2017년 5월 현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물 관리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시작 후 같은 해 5월 22일 제5호 업무 지시를 통해 ‘물 관리 일원화’를 표명하였으며, 이후 2018년 6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분리되어 있던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 일원화’가 시행되었다. 지하수 분야 또한 물 관리 일원화를 통해 환경부로 이관됨으로써 수량, 수질의 이원적 관리 체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제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독신 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 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